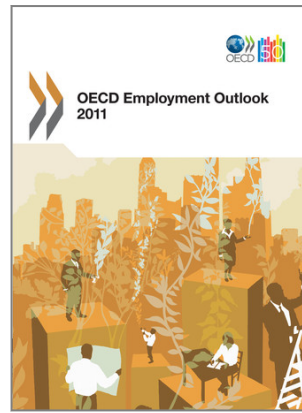


OECD *Multilingual Summaries*
OECD Employment Outlook 2011
Summary in Korean



Read the full book on:
10.1787/empl_outlook-2011-en

2011 년 OECD 고용 전망

국어 개요

- OECD 고용 전망은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과 고용 현황을 다루는 OECD의 연차 보고서이다.
- 2011년도 보고서에서는 금융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시장 여건을 살펴본다. 전체 실업률이 경기침체의 정점을 찍고 내려왔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며 특히 불리한 환경의 청년과 같은 취약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재정의 압박이 있기는 하지만 높은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2008-09년 경제 불황은 OECD 국가 사회안정망에 대해 힘겨운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회가 되었다. 고용 전망 보고서는 실업자 대상의 소득 지원 간에 드러난 상당한 격차를 확인시킨다. 심각한 경기침체기에는 정상적인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비교적 짧고 장기 실업자들의 “최후의 방편”인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된 국가들은 더더욱 실업급여의 최장 수급기간을 임시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것이 금번 경제 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 중 하나이다.
- 2011년도 보고서에서는 신흥경제국들의 사회보장제도를 살피고 근로의욕 저하를 막기 위해 어떻게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브라질의 실업보험, 남아공의 현금 이전, 멕시코의 건강보호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통해 신흥경제국의 확장된 사회보장제도들이 설계가 잘 되었으면 노동시장의 성과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2011년도 보고서에서는 OECD 국가에서 상당수 노동인력의 근로소득이 매년 큰 폭의 변동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 소득이 크게 줄면 가정의 빈곤 위험과 재정의 어려움이 늘지만 누진적 소득세와 관대한 실업급여는 소득 변동의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경향이 있다. 고용 보호는 거시경제 충격이 단기에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엄격한 해고규제는 흔히 노동시장 이중성과 관련돼 있어 정책당국들은 해고규제가 초래하는 상반된 효과 간에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고용보고서에 의하면 OECD 근로자의 4명 중 1명이 일자리에 비해 자격이 넘치는 상태며 5명 중 1명이 자격미달이다. 자격의 불일치가 근로자들이 보유한 직업능력과 노동시장에서 요구된 직업능력 간의 실제적인 불일치를 꼭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자격과잉인 근로자의 40% 정도는 그들이 직장에서 보다 어려운 업무를 처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와 기타 새로운 실증연구 결과들은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요구된 직업능력을 습득하고 이러한 직업능력을 가장 적합한 일자리와 일치시키는 데 있어 교육제도, 평생교육기관 및 노동시장정책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근거가 된다.

미완성 사업: 청년에 대한 투자

일자리 증대를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노동시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일자리를 많이 가져오는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장기실업 해소를 위한 핵심대책이 돼야 한다. 그렇지만 경제위기가 닥치기 전에 탄탄했던 경제여건에서 소득 불평등과 보수가 좋은 생산직 진입 차원의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줄이지 못함으로써 상실케 되었던 기회들을 만회하기에 이 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 실제로 2008년도 OECD 소득분배와 빈곤 보고서의 이번 후편에서 입증되었듯 이러한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된 경우도 꽤 있었다.

젊은층의 상당수가 노동시장과의 관계가 단절될 위험이 큰 상황이며 이러한 위험은 경제위기로 더욱 커졌다...

본권의 1장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경기침체로 지나칠 정도의 타격을 받았던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2011년 1.4분기에 OECD 국가의 15~24세 청년 실업률은 17.4%였으며 25세 이상의 인구 실업률은 7%였다.

그러나 청년실업에 관한 자료들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의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위 NEET 족이라고 불리는 일자리 없고 취업을 위한 교육 또는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들이 노동세계에서 벗어난 기간이 길수록 노동시장에서 소외될 위험은 더더욱 크다. OECD 30개국에서 입수된 자료를 보면 2010년 4.4분기에 15-24세 청년층 가운데 NEET 족은 12.6%였는데 이는 2008년의 10.6%보다 늘어난 수준이었다. 2,230만명의 청년이 NEET 족에 속하며 이들 중 1,460만명은 비경제활동인구이면서 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였고 770만명은 실업 상태였다.

일자리 회복이 저조한 여건에서 젊은이들과 호황기였다면 취직되었을 자들도 장기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의 위험을 받는 경우가 늘면서 장기적으로 그들의 경력에 소위 오점효과라고 불리는 부정적인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는 오랜 구직활동의 어려움, 동료와의 지속적인 임금 격차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 몇 년간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더 많이 분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의 소외를 해소하는 방안은 많이 연구된 과제이지만 해결책은 결코 쉽지 않다...

일부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가 저조하다는 점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며 여러 해 동안 정부의 관심을 받은 문제였다. 실제로 지난 50년간 청년 문제는 OECD의 고용정책 검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다룬 주제다.

이 연구를 통해 명확해진 사실은 모든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좋은 출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신속한 해결책은 없다는 것이다. 다른 국가보다 잘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는 핵심청년층의 문제해결은 모든 국가들이 직면한 과제이다. 일자리 창출을 늘리는 것이 주요 해결책이지만 다른 대책을 수반하지 않는 한 모든 청년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2010년 “청년 일자리 출발은 좋은가”라는 OECD 보고서는 16개 조사 대상국에서 얻은 주요 교훈을 요약하여 청년들이 경력단계에서 첫 거점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모범 사례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막는 구조적 장애요소와 또 한편으로 경제위기와 함께 취직 또는 교육 중이 아닌 청년들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두 갈래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첫째, 오랫동안 모든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서 더 좋은 출발점을 갖지 못했으므로 이를 극복키 위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 가정과 불리한 환경의 아동을 위한 유아 보육을 향상시키도록 예방 차원의 대

책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이 충분히 효과를 내려면 의무교육 기간 내내 지속돼야 한다. 그러면 학생들의 중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대책들은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습득한 직업능력과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직업능력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으로 보완돼야 한다. 본권의 4 장에서 보여주었던 젊은 근로자 가운데 일자리에 비해 자격이 넘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이러한 비중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직업능력간의 차이를 좁히려는 변하는 직업능력 요구에 대한 교육제도의 신속한 대응력과 직업교육과 훈련 기회 등을 통한 교육선택 폭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청년 고용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특히 종신고용계약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로 인해 노동시장 분단이 심화되었다는 점은 단기 일자리 진입이 안정된 일자리 확보를 위한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막다른 길로 인도하게 됨을 의미할 수 있다. 평균임금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된 최저임금은 고용주들이 저숙련 노동자와 경험이 없는 청년층을 채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이 몇몇 있다.

재정 압력이 있어도 대폭 늘어난 청년 실업을 해소키 위한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정책노선은 최근 경제금융 위기로 인한 청년실업 증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많은 국가들이 재정 건전화에 대한 거센 압력을 받으면서 국가정부들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를 높이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개입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장기 실업자, 소외될 위험이 큰 계층을 비롯한 가장 불리한 집단에 정책의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은 일할 준비가 된 것으로 평가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가장 비용효과적인 조기 개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적인 사회안전망 확장도 청년 실업자들의 빈곤 방지에 중요할 수 있다. 본권 3 장에서 보여주었던 젊은 근로자 사이에서 소득 변동이 특히 높다. 고용주들의 저숙련 청년실업자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임금보조금을 도입한 국가들도 몇몇 있다. 그렇지만 보조금 없이도 이뤄졌을 채용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듯이 보조금의 잘 알려진 사중손실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또는 수습계약 등과 같이 보조제도 대상을 적절히 설정해야 된다. 아울러 상당수 국가들이 수습 또는 이원 체제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같이 “이론 및 실습” 프로그램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제지원은 사회적인 소외 위험이 가장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더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학업 복귀 전략은 이들에게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드러날 수 있는 반면 전통적 학교를 벗어나 외부에서 훈련프로그램을 받으며 직업 경험과 성인 멘터링을 정기적으로 접하는 것은 외부와 단절된 청년들에게 통상 더 좋은 전략이 된다.

청년에 대한 투자는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더 높은 경제사회성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목표가 돼야 한다.

청년에게 투자하고 근로세계에서의 더 좋은 출발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정책목표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 남겨져 어두운 고용과 소득 전망에 직면한 청년층이 계속 남겨나 늘어날 위험이 크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서 OECD 국가의 경제와 사회는 이러한 결과가 수반하게 될 커다란 경제사회비용을 감당할 수는 없다.

© OECD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Read the complete English version on OECD iLibrary !

OECD (2011), *OECD Employment Outlook 2011*, OECD Publishing.

doi: 10.1787/empl_outlook-2011-en